

문재인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대중 운동이 중요하다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
문재인 정부

2면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3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2, 4~6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7면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8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웹사이트

한미정상회담 합의
논평

웹사이트

이스라엘 경찰, 휴전하자마자 또 공격 팔레스타인, 또다시 대차게 저항하다

이원웅

이스라엘의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또 공격했고, 팔레스타인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5월 22일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선언한 것이 곧 점령과 억압의 종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서 예루살렘 내 적대 행위 중단을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다.

휴전 선언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 경찰은 알아크사 모스크에 모인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을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공격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금요일마다 예배가 끝난 뒤 시위를 벌여 왔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다.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도 이스라엘 경찰은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자파시(市)에서는 밤중에 국경 경찰이 팔레스타인계 동네를 습격해 가정집에 섬광탄을 던지는 영상이 찍혔다.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팔레스타인계 사람들이 사복 경찰들의 감시 아래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에 참가하거나 정당방위를 행사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거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조차 “검문소, 섬광탄, 경찰 폭력이 자파시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또다시 로켓포를 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의 힘”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러댔다.

하마스는 2007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이지만,



18만 명이 외치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5월 22일 런던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베니 간츠는 가자지구 “재건”에서 하마스를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를 주도하게 하려 한다. 가자지구를 폭격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를 복구하는 과정도 하마스를 옥죄는 데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면 더 큰 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가자지구 폭격은 멈췄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위

이런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며 또다시 세계 각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5월 22일 런던에서는 무려 18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였다.

시위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행진하며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었고,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 대열에는 젊은 무슬림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

시위 참가자인 마리는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들은 휴전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외에도 크고 작은 도시 63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맨체스터에서는 4000명이 모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주말 사이에 뉴욕·필라델피아·시카고·포틀랜드 등지에서 집회와 행사 90여 건이 벌어졌다. 텍사

스주(州) 휴스턴에서도 3000~4000명이 행진했다(경찰 추산).

5월 21일 뉴욕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규탄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유대인 아사프 칼더론은 AP 통신에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옥죄기를 멈추고, 점령과 강제 퇴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 유대인과 시오니즘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에 속는 것입니다.”

최근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강화된 프랑스에서도 항의 행동이 벌어졌다. 프랑스 노동총동맹 CGT는 파리 집회에 4000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리옹·릴·스트라스부르·툴루즈 등지에서도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파리 시위를 조직한 ‘팔레스타인 연대 연합’ 대표 베르트랑 아일브롱은

“휴전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파키스탄·예멘 등지에서도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연대

국제 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을 성취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대 행동이 5월 18일에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살상에 일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00년대 내내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 동안에는 박근혜 정부 4년(116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무기가 수출됐다(267억 원 상당).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가자지구 폭격이 한창일 때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전범 국가 이스라엘과 그 전쟁범죄를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를 나타내자.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보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 ★ 차별금지법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다
- ★ 콜롬비아 항쟁,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다
- ★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녹색성장 정상회의(P4G) 개최로 ‘그린워싱’ 문재인 정부

장호중

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 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회원국이 아니다.

제안국인 덴마크는 자신들이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

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창립을 주도한 듯하다. 다른 참가국들은 덴마크의 기술 지원을 기대하는 한편, 자신들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국제회의를 주최한다며 자랑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은 초라하다 못해 역행한 측면도 있다.

정부의 ‘녹색’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담에 참가해 3분간 연설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 계획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였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준으로 37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이를 2017년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24.4퍼센트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놀랍게도 그 양은 똑같이 5억 3600만 톤이다. 조삼모사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새로 제출해야 하는 감축수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

둘째, 한국 정부가 2019~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10퍼센트 줄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는 애당초 단기 감축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다. 이 감소가 정부 정책 덕인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줄어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셋째,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했다”고 말했다.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이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곳이 건설 중이고, 이 설비용량을 합치면 폐쇄된 양보다 훨씬 많다. 즉 앞으로도 석탄화력발전량은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친환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 이명박의 ‘녹

색 성장’ 2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등 탄소 배출을 늘리는 정책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의 P4G 개최가 기만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국내 기후 운동 단체들이 P4G 초청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

청와대, 또다시 검찰 수사권 갖고 놀다

김문성

민주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파란색'과 '내로남불'.

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려고 외부에 의뢰한 집단심층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이 조사에 바탕해 민주당 정치인을 의인화하면,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50대 남성”이다.

2년 전(2019년 8월) 같은 조사에서는 주요 응답에 부정적 이미지가 없었다. 이후엔 내로남불 사건의 연속이었다. 사람만 봐도 조국, 추미애, 윤미향, 오거돈, 박준영 등등.

4·7 재보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LH 투기 의혹 및 대응'(84.7퍼센트), '부동산 정책'(84.5퍼센트)이라고 답했다. '여권 인사 부동산 논란'도 80퍼센트를 넘겼다.(복수 응답이었던 듯하다.)

부동산 문제 불만과 내로남불 비판은 일맥상통한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개혁을 표방하고 대책을 스무 번 넘게 내놔는데, 결과는 불평등 심화, 내 집 마련 절망, 개혁 배신, 위선(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강남에 집 2~3채 보유)이었다. 그러니 무능, 내로남불(위선), 입만 산 놈의 이미지가 안 생길 수 없다.

그러고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도리어 대중, 특히 실망한 20대 청년들에게 보수화인 역사 의식이 없니, 성차별적이니 하며 너희들이 문제라고 훈계질했다.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 때문에 진보 개혁 염원 대중의 불만을 달래거나(기대감을 줘서 일단 기다리게 만들어) 억제하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 단면이다.



끝없는 위선 새 검찰 총장 후보 김오수는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 펀드 사기 피의자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총장 임명 전 정부는 검찰의 권력층 수사를 약화시킬 조직 개편안을 내놔다. 지난해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에게 '검찰 개혁 계획' 보고 받는 문재인

민주당이 더 추락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의석의 우위가 확연하고,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차기 대선 유력 주자를 보유한 덕분이다.

개혁 배신으로 민주당이 환멸과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이 지사는 진보 포퓰리즘적 언행을 하고 실제로 얼마간 개혁을 제공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지사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통하는 대선 후보다. 누가 나가도 이길 것 같지 않았던 탓에 지리멸렬했던 2007년의 민주당과 다른 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합의를 하고 와서 귀국길에 재계와 우파의 환영을 받았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오른 쪽으로 더 분명히 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더 오른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비토를 받지 않으려고 이재명 지사도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칭찬하고, 친기업 언행을 늘리고 있다. 5월 24일에는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기아

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다.] ...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로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민주당은 부동산ITF에 당내 우파인 김진표를 포함시켰다.

민주당이 오른쪽 눈치보기(이재명 지사의 표현을 빌면, “외연 확장”)에 신경을 쓸수록 진보계의 비판이 세지겠지만, 민주당은 그런 지도자들도 결국엔 대선 이 다가오면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 민주

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정의당의 저조한 지지율도 한몫한다.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비판적) 협력 노선에서 '반기득권' 정치동맹(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와 차별화하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이 9개월 남짓밖에 안 남은 탓에 주류 여야양당이 가하는 압착 효과로 정의당(그리고 진보당도)의 지지층 신뢰 회복이 아직은 더디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70대 꼰대 남성”으로 의인화됐다.

더 나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2년 전 조사보다 이미지가 개선된 결과라고 한다. 오죽 나빴으면!

국민의힘의 최근 당대표 경선을 보면, 우익이 아니라 중도우파처럼 보이기, 늙은 꼰대처럼 안 보이기, 중도우파 인물들을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영입하기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드러난다.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은 LH건 비리 폭로와 동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탓이 컸다. 그것은 윤석열이 반(反)문재인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간다는 뜻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내에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중도와 태극기 우파로 분열된 전통적 지지층을 묶어 낼 지도력도 세우지 못하던 국민의힘에게 청신호였다.

윤석열뿐 아니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문재인 정부)도 영입 대상으로 언급되는데, 둘 모두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고, 정치 성향적으로 중도우파로 비치는 인물들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류 양당이 중도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아직 사회 전반에서 정치 양극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층 수사는 한사코 막으려 한다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 결정판은 누가 뭐라 해도 '검찰 개혁'일 것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억압적 국가기관인 검찰의 권력을 줄이겠다고 표방했다.

그러나 막상 검찰과 현 정부가 밀월 관계일 때 검찰 개혁은 별 진척이 없었다.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오히려 검찰 직접수사가 강화돼, 그 덕분에 이명박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을 때, 검찰은 반대했다. 구린 구석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여권 내에서는 조국 수사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도 대통령이 원하면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 있

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여권이 '선출된 권력 우위론'을 편 진짜 속내는 이것이었다.

결국 조국 이후로도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있는 추미애, 택시기사 폭행과 조직적 은폐 의혹이 있던 이용구, 고시생 폭행 의혹과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문제가 된 박범계 등이 줄줄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한 쪽 편들 이유 없다

지금 새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검찰 조직 개편안은 권력층 수사를 더 약화시키고 정권의 통제권을 높이는 것이다.

내용은 검찰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합하고, 이 부서만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즉,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인 것이

다.

따라서 반부패·강력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지검에서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검들 산하에 있는 25개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요청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6대 범죄는 대부분 권력층이 벌인 범죄이므로 이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추한 속셈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검사들이 다시 반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친정부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의 청문회 직전, 그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잠시 민간인일 때,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재판에서 사기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와 동시에, 이 개편안은 윤석열이 사퇴하자 이제 새 검찰총장에게 권한을 더 주려는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의 권력기관끼리 빛는 갈등에서 누구 편을 들거나 대표적 억압 기관인 검찰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 첫째, 검찰과 청와대 대립에서 민주당을 편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은 이전 집권 기간을 거치면서 지배계급 기반이 탄탄해져서 어엿한 지배계급 정당으로 군림해 왔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패기는 민주 개혁의 취지에 바탕한 단순한 검찰 권력 축소가 아니다. 정권 수뇌부의 검찰·경찰 통제를 늘려서 권력층 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여당과 검찰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이를 폭로하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좌파 지도부 다수가 검찰 개혁을 진보적 개혁으로 오해하고 지지를 제공했던 것이 과오인 이유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소

동에 짜증을 내고 선거를 의식해 비난 공세를 하면서도 정작 검찰 수사 기능 약화에 결사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늘어난 수사기관들끼리의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는 부패를 덮어주는 기능을 해 주길 바랄 것이다. 공수처가 난데없이 자신들이 기소권을 가진 대상도 아닌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로 삼은 것도 공수처가 진정한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준다.

LH 비리 건 수사가 별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의 기소 가능 대상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이 그렇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배계급이 우려하는 게 있다면, 수사기관들끼리의 경쟁으로 때로 칼날이 자기를 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시온주의는 유대인 민족주의일 뿐이다

박이람

중동 전문 잡지 〈미들이스트 솔리데리티〉 공동편집자,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SOAS) 대학원 재학

이 글은 5월 21일 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강연을 녹취해 글로 표기해 준 나유정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언한 것이다.

5월 22일(한국 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이 발표됐다. 먼저 이에 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 휴전은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테러의 뿌리를 뽑겠다’,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운운하던 네타냐후 정부가 갑자기 무조건적 휴전을 합의한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국제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일시적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전투는 이겼을지 몰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학살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선 저항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을 두고 “잔디는 주기적으로 깎아 줘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5~6년마다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거기서 자라나는 저항 운동을 짓밟아야 더 큰 후환이 없으리라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잘 드러나는 말이다.

잔혹

이제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몇 가지 수치를 들어 살펴보겠다.

11일간의 폭격 동안 232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다고 집계됐다. 사망자 중 65명이 어린이이었는데, 그 중 11명은 이전의 폭격·전쟁으로 입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폭격은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이었다. 이스라엘은 2014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폭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규모만 보면 이번이 2014년의 3배 정도 되는 역대 최대였다. 가족이 수천 채 파괴됐고, 수만 채가 파손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가자지구는 한국의 진도보다 약간 좁은 땅이다. 거기에 약 200만 명이 산다. 인구가 얼마나 밀집한 지역일지 대략 가늠이 될 것이다.

이런 곳을 이스라엘은 정말 악랄하게 폭격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병원·도로·수도·전기 등 인프라 시설들을 노렸다. 이스라엘

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 건물은 폭격하지 않았지만 그 병원으로 이어지는 주변 도로를 모두 폭격해 구급차가 부상자를 후송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산업 시설도 폭격했다. 공장이 파괴되면 노동자들과 그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이스라엘 측 인사 한 명은 가자지구를 “석기 시대로 되돌려 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유일한 코로나19 검사 시설도 폭격했다. 그래서 아무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가자지구 내 코로나19 방역 책임자도 폭격으로 사망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가자지구에 백신 반입을 막고 있었는데, 이번 폭격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됐다.

인종 청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대체 왜 가자지구를 폭격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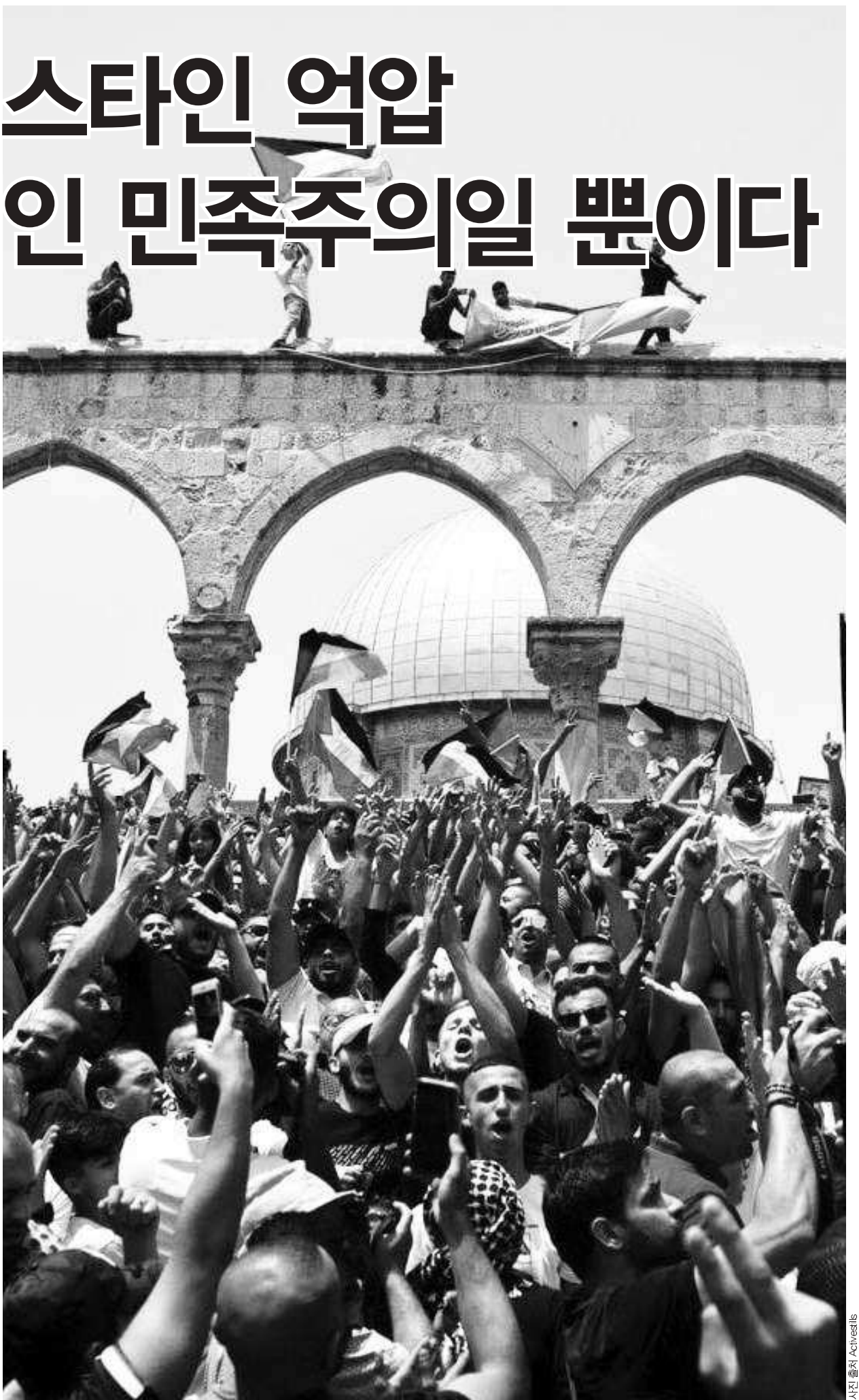
다음 사진(5면)은 예루살렘 내 ‘셰이크 자라’라는 동네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곳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유대인 정착민들을 채워넣는 인종 청소, 이른바 ‘유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유대화’ 작업은 팔레스타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걸린 집은 원래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평생 살아 온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없어’ 하며 경찰이 이 가족을 쫓아내고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그 집을 내어 준 것이다. 짐도 못 챙기고 쫓겨난 이 팔레스타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바라만 보면서 거리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강제 퇴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경찰이 이를 탄압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대규모 저항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라마단’(이슬람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1년 중 한 달로, 올해 라마단은 5월 12일에 끝났다) 기간에 광장히 많은 사람들이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이스라엘 경찰이 그 시위를 탄압하면서, 이슬람의 3대 성소 중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를 침입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모스크 경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평화롭게 예배를 보던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저항이 시작된 것이다.



휴전 선언 직후 알 아크사 사원 앞에서 환호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이스라엘 — 인종차별적 식민 국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전역이 셰이크 자라였다고 말한다. 이번 셰이크 자라 강제 퇴거는 팔레스타인인들이 70년 넘게 일상적으로 겪어 왔던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과정을 보자. 이스라엘은 결코 일반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식민 정착자 국가”라고 불린다. 이는 (마치 지난 세기 일제와 조선처럼) 식민 국가가 식민지를 점령하는 것과 달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일부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그곳을 식민 점령(정착)했다는 뜻이다.

대체 왜 일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을까? 시온주의라는 정치 운동이 그 출발점이었다. 시온

주의는 유대 ‘민족’만으로 이뤄진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한다는 정치 운동으로,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다.

시온주의는 18~19세기에 러시아·폴란드 등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유대인 대량 학살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학살을 피하기 위해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는 운동이었다. 시온주의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 운동은 지지하지만, 시온주의는 지지할 수 없다. 시온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와 결탁해 타민족을 억압하는 반동적 정치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온주의 운동으로 수립된 이스라엘 국가는 태생부터 인종 차별과 억압에 기반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이다. 그렇기에 모든 유대인이 시온주의와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지 234호, ‘이스라엘 반대가 유대인 배척일까?’를 보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만 봐도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고 이스라엘 국경 안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도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것은 단지 현 네타냐후 정부가 우파 정부라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집권하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 근본 자체가 인종차별과 타민족 말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 이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세이크 자라의 주택

이스라엘은 이 집에 살던 팔레스타인 가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인들이 살게 했다

제국주의의 후원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과 존속의 배경에 제국주의의 후원이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제국주의는 이스라엘의 탄생부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시온주의자들의 계획이 처음 서방측 제국주의의 승인을 받은 것은 1917년이다. 당시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 영국은 유럽 거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하고 무기도 제공했다. 1900년대 초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

원래 그 지방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인들이 학살과 억압을 피해서 이주한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 정착민들이 그제 이주민·난민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고 그 자리에 유대민족만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나크바

이후, 영국이 지원한 무기로 무장한 시온주의 테러 조직과 민병대들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공격하고, 어린이와 여성을 죽이고, 인종 청소를 하고, 마을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 버리는 일들을 몇 년 동안 계속했다.

1948년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가 벌어져 엄청난 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학살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게 됐다. 팔레스

타인인의 약 80퍼센트가 살던 마을을 버리고 인근 지역으로, 요르단·시리아·레바논 등 인근 국가로 이주했다.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은 ‘나크바’가 시작된 날을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로 삼았다.

건국 이후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치렀다. 제국주의자들이 지원한 무기로 아랍 국가들을 침공하며 영토를 계속 확장했다. 그 과정은 [지도1]을 보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팔레스타인 영토에 유대인 정착촌을 속속 건설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 할당된 지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세이크 자라도 그런 정착촌 건설, 즉 팔레스타인인들을 모두 죽이든 추방하든 ‘청소’하고 그 자리를 유대인들로 채워넣으며 팔레스타인 영토를 완전히 잠식하는 이른바 ‘유대화’ 작업의 일부로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확장을 뒷받침한 핵심 제국주의 국가는 애초에는 영국이었다. 이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과정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전쟁이 맞물리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후원국 자리는 점차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1979년 이란 혁명이었다.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파홀라비 왕조가 타도되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전”이자 침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게 된다. 그후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크게 늘어,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이스라엘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기도 하다.

두 가지 저항

이스라엘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저항해 왔다. 바로 무장 단체 등 조직적 대응과, 평범한 사람들의 아래로부터 저항이다.

첫째 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이다. PLO는 이스라엘에 맞서 무장 투쟁하기 위해 1960년대에 건설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조직인데, 1980년대에 탄압을 피해 국외로 망명해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존재감이 줄었고, 많이 우경화하고 온건해졌다.

이를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하마스다. 하마스는 1987년 1차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에 맞선 무장 투쟁을 통해 부상했다. 하지만 이제 하마스도 많이 온건해져, 이스라엘을 부정하던 데서 입장을 바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데까지 후퇴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

1993년 PLO와 PLO를 계승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오슬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로 인정하되, 나머지 영토 전체를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 분할안이 나왔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전략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할까? 팔레스타인인들의 힘으로만 가능할까?

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엄청난 영감과 용기를 전 세계, 특히 아랍 민중들에게 주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저항만으로는 해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자체의 힘도 힘이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제국주의 동맹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막대한 후원을 쏟아붓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영국·프랑스 등 주요 서방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한국도 이스라엘 지원국이다. 며칠 전 <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들어 300억 원 넘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했다고 폭로했다. 놀랍게도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갑절로 많은 것이다. 그렇게 판매한 무기는 대부분 발사 무기류, 폭탄, 수류탄, 미사일 등이다. 한국에서 만든 무기들이 가자지구에서 탄압과 살해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것도 폭로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렇게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동맹들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지원

이 협정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급격하게 온건화·우경화하기 시작했다. 오슬로 협정으로 사실상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서안지구 안 정부에서 월급도 받고, 심지어 부를 축적하기도 하면서,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과는 격차가 커지게 됐다.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그저 단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탄압하기까지 한다. 이번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연대 시위에 나섰을 때 가장 먼저 이 운동을 공격한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자치경찰이었다. 과거에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리해 활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기도 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신뢰를 거의 받지 못한다.

진정한 희망은 둘째 방식, 즉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있다.

1987년 1차 ‘인티파다’, 2000년 2차 ‘인티파다’, 그리고 올해 대규모 저항 모두 아래로부터 벌어진 저항이다.(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그 누구도 이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

다.) 그런 저항들이 일어날 때면 국제적 연대도 크게 벌어졌다. [지난 5월 18일 팔레스타인인 30여 명과 함께 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집회도 이런 국제적 운동의 일부였다.]

특히, 이번 저항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매우 젊다는 것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인구 절반 정도가 23~24세 미만이다. 이 세대는 기존에 있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 정파들 간의 갈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바로 그런 젊은 세대가 이번 저항의 주축이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가자지구뿐 아니라 서안지구에서도, 심지어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연대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2차 ‘인티파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2006년, 2008년, 2014년에 거듭 가자지구를 폭격했는데, 그때는 가자지구를 제외한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자지구 폭격 반대 시위가 이 정도까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를 두고 [시오니즘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는 저명한 유대인 학자 일란 파페는 “팔레스타인의 젊은 세대가 정치적 부족주의를 극복했다”고 했다.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일부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영국·한국의 대중이 자국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랍 지배자들도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다. 아랍 지배자들은 말로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 형제들이다’ 하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군사·안보 교류를 비밀리에 해 왔다. 이것이 지난 트럼프 정부 들어서 공식화된 셈이다.

이집트

트럼프는 이란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친미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끌어당기려 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오만·수단·바레인·모로코 등 많은 아랍 정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를 ‘정상화’해, 대놓고 이스라엘과 동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아랍 민중의 저항·반란·혁명적 투쟁들이 벌어져,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아랍 지배자들에게 맞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랍 민중의 저항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반제국주의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랍의 지배자들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극도로 경계한다. 최근 알제리, 이집트 등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집회에서 사용하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18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집회 때 한 이집트 출신 난민은 “팔레스타인 깃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꼭 준비해 달라고 주최 측인 노동자연대에 부탁하기도 했다.]

2011년 아랍 혁명 당시 그런 희망을 흘렸 볼 수 있었다. 당시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나, 아랍 지배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원한 호스니 무바라크가 퇴진하고 무슬림형제단 정부가 집권했다.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가스 수출도 중단되고, 가자지구와 마주한 이집트 국경이 개방돼 구호 물자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이런 점을 보면, 우리가 아랍 민중의 저항에 연대하고 그런 저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친서방 지배자들이 더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이 폭로·항의하고 연대를 건설하는 일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질의에 대한 응답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몇 가지 질문씩 묶어 답변하겠다.

첫째, 이스라엘 국가에 관해 다시 말해 보겠다. 이스라엘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첩병이고 경비견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지배자들, 시온주의자들 고유의 의제도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고 이른바 유대 ‘민족’으로 채워넣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살인이든 학살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것이 시온주의자들의 프로젝트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폭격의 배경을 설명하겠다. 앞서 말했듯, 유대 단일 민족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번 공격의 배경 중 일부다.

이에 더해, 미국의 중동 개입, 미국과 중동 지배자들의 동맹 관계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은 이란이라는 ‘대적(大敵)’에 맞서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의 친미·친서방 국가들을 화해시키려 노력했다. 트럼프가 직접 아랍 지역을 돌며 외교 정상화의 브로커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듯하다. 이전 같으면 아랍 지배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의식해 말로라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규탄해야 했지만, 이제는 외교 관계도 ‘정상화’됐으니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규탄·적대하지 않으리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네타냐후 정부를 비롯한 장관들의 말을 보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보다 자신감을 가졌음이 감지된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 다른 동맹들이 간과한 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엄청난 저항이었다. 아마 이들은 예전처럼 ‘어느 정도 시위하고 말겠

지’ 하고 과소평가했을지 모르겠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넘어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까지 단결된 대규모 운동을 벌일 줄은 예상 못했던 듯하다.

20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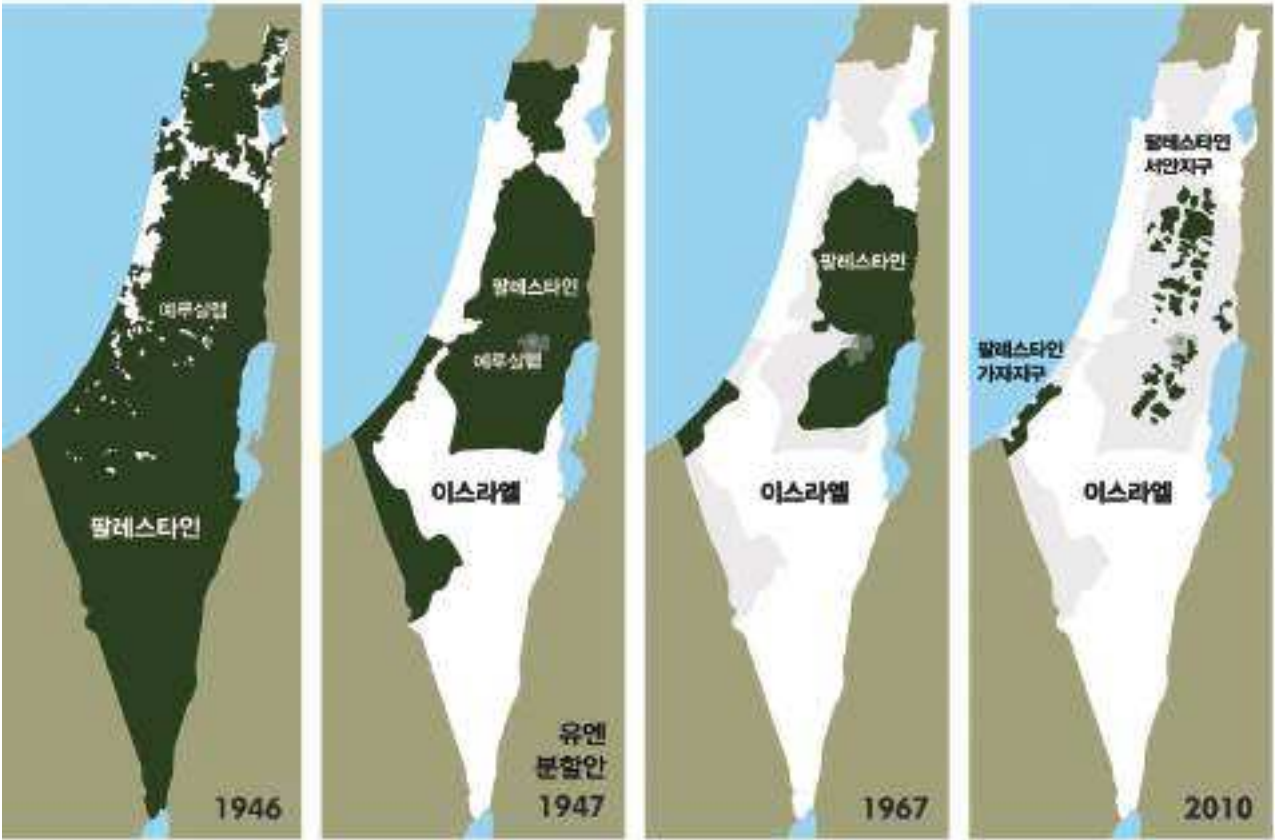
둘째,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질문이 있었다. 이스라엘 인구의 약 20퍼센트 정도 된다.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이니 20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20퍼센트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잔혹함을 잘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전 총리 이츠하크 라빈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민족’이 우위를 유지하려면 아랍인 인구가 전체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하고 말한 바 있는데, 바로 그 수치에 맞춰 수십 년 동안 계속 인종 청소를 해 온 증거다.

이런 인종차별 때문에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 5월 18일 팔레스타인에서는 총파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총파업이 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이스라엘 경제는 벤처·IT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1·2차 산업이 멈춰도 이윤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의미를 볼 때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단결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저항했다는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팔레스타인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없지는 않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고 기껏해야 별종 취급 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는 앞에서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국가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지도 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토의 변천사

목적 자체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고 학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아파트헤이트(인종차별, 인종분리) 정책에 뿌리를 뒀고, 이런 프로파간다에 동의하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며 인구를 불러 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공격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인들이 적은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아파트헤이트 체제가 사라지고,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세속주의적 민주적 국가가 수립되는 것이 대안이다.

국제 연대

넷째,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이 유대인 혐오자라고 하는 거짓 비방이 있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 연대가 그런 비방에 맞선 반박이 됐는지를 물은 분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유럽뿐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곳에서 좌파를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 혐오자라고 낙인찍는 공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만행은 도저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였다. 그래서

그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며 꾸준히 운동을 건설해 온 좌파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이번에 벌어진 국제 연대에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미국 각지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이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경찰과 국가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덕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더 확대될 공간이 열렸다.

이런 점이 일부 반영돼,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진보파 의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의정 활동 역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민족의 해방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스라엘을 지지·지원·후원하는 한국 등 여러 나라 정부들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팔레스타인인들은 1948년 이후 70년 넘게 끊임없이 실로 영웅적인 투

쟁을 벌여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난민·난민이 발생하고,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국제 연대, 평범한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들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노취 나유정

추천 책 / 소책자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
앤 알렉산더 지음, 이수현 옮김, 노동자연대, 48쪽, 3,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바이든은 왜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을까?

소피 스카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끔찍한 공격을 퍼부어 팔레스타인인 248명이 목숨을 잃은 후, 5월 19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며칠 전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두둔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 휴전 촉구 성명 채택을 네 차례나 막았다. 결국 미국의 거부로 성명 채택은 무산됐다.

바이든이 이제 와서 휴전을 촉구한 까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하기 위해



5월 25일 미국 국무부 장관 앤터니 블링컨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서가 아니다. 반(反)이스라엘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자국 국민 눈치를 보는 동맹국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물결이 중동 전역으로 퍼지자 일부 아랍 통치자들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이 연대 물결을

잠재우려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외에도 이집트 대통령 압둘파타흐 시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와도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합의를 주선한 이집트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동맹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집트와 요르단에도 들를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은 아랍 동맹국을 잃거나 그 나라 정부들이 대규모 거리 시위에 직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취한 노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주요

요구를 지지하고 아랍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그보다는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여전히 “하마스과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의 무차별 로켓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방어체계 보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변변찮은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이 지원은 하마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지원금이 그저 하마스의 무기고

를 채우는 데 쓰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미심장하게도, 바이든이 휴전하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굳히자 이스라엘은 이를 따랐다.

일각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미국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항상 정확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에 속속들이 연루돼 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일당이 계속 살인을 저지룰 수 있는 이유는 바이든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56호 번역 최병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팔레스타인 저항을 되레 키운 이스라엘의 전략

이스라엘의 거대한 전쟁 기구가 가자지구에 무시무시한 죽음과 파괴를 물고올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 같은 민족 해방 투쟁에서는 정치가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질로 폰테코르보 감독의 걸작 영화 〈알제리 전투〉를 본 사람이라면, 1956년 동명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승리한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결국 끈질긴 투쟁은 알제리를 식민지로 붙들고 늘어지려는 프랑스 지배계급의 의지를 꺾었다.

최근 전쟁이 일어나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부패한 우익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잠재웠다고 자랑할 수 있었다.

네타냐후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공통된 증오를 이용해 국도로 부유한 페르시아만 연안 왕국들과 관계를 좁혀 왔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2020년 네타냐후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다. 네타냐후는 이와 유사한 평화협정을 페르시아만 연안의 최고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맺고 싶어 했다.

부패

이슬람주의 운동 하마스는 가자지구라는 감옥에 갇혔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명목상 통치하는 부패하고 무능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하마스가 또 이길까 봐 선거를 취소했다.

네타냐후는 점령지 일부를 이스라엘로 병합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그러다가 네타냐후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다. 총리직을 유지하는 한편 감옥행도 피하려 고군분투하던 네타냐후는 자신의 극우 동맹들을 부추겨,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퇴거시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하게 했다.

이 시도가 네타냐후를 곤경에 빠뜨렸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반격했다. 이스라

엘이 보인 오만과 무자비함에 분노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도 거리 시위를 벌였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시위 진압 경찰은 이슬람 최고 성지의 하나인 알아크사 모스크를 여러 차례 침입했다.

이스라엘 공식 국경 내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최근 스스로 “유대 민족 국가”임을 명시적으로 선포한 이 나라에서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은 이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

우익 유대인 정착민들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짓밟으려 하자 시위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로도 번졌다. 그러자 하마스로 로켓 공격으로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데에 가세했다.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 는 이렇게 논평했다.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가능할까? 한편에는 중동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제국이, 다른 한편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조잡한 로켓뿐인 테러 조직 하마스가 있다. 그런데 하마스가 온 나라를 위협하는 데에 성공했다.”

네타냐후가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전쟁 때처럼 이스라엘방위군(IDF)에서 사상자가 생길까 봐 두려워했음이 틀림없다. 한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그랬다가는 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사상자를 내거나 주택가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방위군의 군사적 교착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반란

한편,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 낼 능력이 있음을 입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이끈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권위를 위협했다. 한 논평가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말했듯, “하마스가 가자지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을 짓밟고 분열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하나 돼 저항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가까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는 이슬람 성지의 수호자를 자처한다.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벌어진 신성모독을 무시하면 역내 경쟁자인 이란과 터키에 득이 될 뿐이다.

네타냐후의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다. 네타냐후는 1990년대 초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시작된 “평화 프로세스”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 왔다. 특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허물고 있다.

네타냐후가 여기에 성공할수록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만 남게 된다. 바로,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민주적 단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중동 전체의 격변 없이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페르시아만 연안 왕국들과 이집트 군사 독재가 이스라엘을 가까이할수록 반란의 불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며, 그 불길은 언젠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56호 / 번역 이원웅



가자 지구에 폭탄 투하

무리수를 뒤 모순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부패한 우익 총리 네타냐후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바이든이 “친노조 대통령”? 바이든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

김준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루스벨트 이후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라는 평이 있다. 트럼프에 견줘 바이든 정부가 몇몇 변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취임 첫날 반(反)노조 인사로 악명 높은 전미노사관계위원회 위원장 피터 립을 해임했고, 3월에는 조직권보호법(PRO Act)을 발의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지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실질적 조치를 취한 것은 없었지만). 바이든은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조합 있는 일자리”라고 거듭 주장한다. 하지만 취임 초기의 제스처 때문에 실체를 못 본 채 넘기면 안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 친화적인 것이 곧 노동자 친화적인(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한) 것 이라고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은, 노동자 조건 공격으로 악명 높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을 주도했고, 6선 임기 내내 거듭 복지 삭감에 찬성했다.

미국 자본주의 효율 제고

사실 바이든의 정책들은 트럼프의 가장 악명 높은 조치 몇몇을 되돌리거나(립 해임이 그 사례다) 생색내기 수준이다. 선진국을 통틀어 손꼽히게 열악한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개혁 조처다. 예컨대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 제정된 아마존·우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앴다. 이를 두고 <한겨레>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플랫폼 기업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조처는 플랫폼 기업들의 고용 유연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ABC>).

바이든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정책인 ‘미국 일자리 계획’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계획은 2조 달러 넘는 대규모 투자로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야심 차 보인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매년 약 190만 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미국에 불황이 닥치고 해고가 기승을 부렸던 레이건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증가분(204만 개)보다 적은 수치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에 따라 개별 자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국가 재정으로 처리하려 한다. 이 계획의 진정한 목적은 노동자 조건 개선이 아니라 미국 자본주의

의 효율과 생산성 개선이다.

물론 바이든은 “국가가 부자들만 구제한다”는 불만과 그에 따른 정치 불안정을 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경제·감염병 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6호 ‘바이든 정부 100일: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그렇게라도 일자리가 생기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바이든도 그렇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노동조합 있는 일자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친노조?

앞서 언급한 조직권보호법은 바이든의 대표적 “친노조”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기업의 노조 설립 방해 시도 일부를 문제 삼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할(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한다. 하지만 기업이 조직권보호법을 어겼을 때 받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게다가 이 법은 노동자들의 쟁의에 매우 까다로운 제약을 가하는 현행법 조항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 요컨대 바이든은 노동조합을 전보다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했지만, 그 노동조합으로 투쟁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게 해 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바이든이 “노동조합 친화적”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바로 미국노총 노동조합 관료들과 친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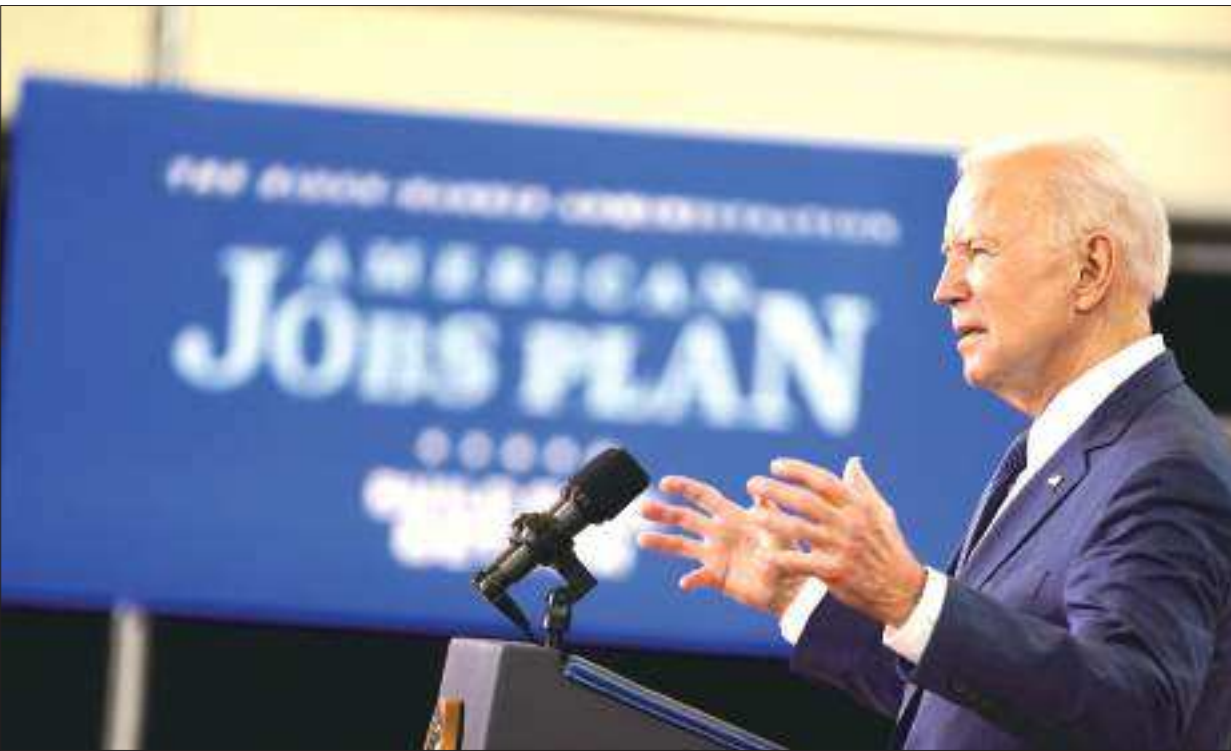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미국 노총 AFL-CIO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고, 취임 후 노동조합 관료 출신 인사들을 몇몇 부처의 실무진에 들이기도 했다. 예컨대 AFL-CIO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 소장 테아 리를 노동부 산하 국제노동관계국(ILAB) 국장에 임명했다.

이는 그다지 새로운 것 없는 일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미국 노동조합 관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 왔다. 실리주의에 찌든 AFL-CIO 노동조합 관료들은 반 세기 넘게 민주당에 의존해 왔다.

그 역사는 1930년대 노동자 투쟁 물결 말미에 산별노조협의회(CIO) 지도부가 루스벨트와 제휴하려 했던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관련 기사 본지 343호 ‘왜 미국에는 노동자 대중 정당이 없을까?’)

이는 오랫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에 독으로 작용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

바이든이 “미국 구제 계획”에서 법정 최저시급 기준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삭제할 때, AFL-CIO 관료들은 바이든과 면담하고 “바이든은 뭘 좀 아는 사람”(AFL-CIO 위원장 리처드 트럼파)



바이든을 미화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투쟁 건설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또, 바이든이 취임 직후 백신 접종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교 재개를 추진할 때, 교원노조 관료들은 바이든을 지지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방역 없는 등교 재개에 반대했었는데도 말이다. 주요 대도시들에서 등교 재개를 미뤄 노동자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 것은 아래로부터 교원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오바마

한편, 바이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실용적으로 바이든의 “친노조성”이 노동조합 조직을 향상에 득이 된다고 여길 수 있다. 예컨대, 1930년대 루스벨트의 전국산업부흥법(NRA)도 노동3권 중단결결만 허용했지만 이후 노동운동에 기회를 제공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이다. 물론 매우 제한적인 개혁으로도 때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제한적인 조처를 “뉴딜 이후 최고의 친노조”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이다. 개혁파 지배자들에게 전혀 환상을 갖지 않게 하면서 대중 스스로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려 애써야 한다.

1930년대 초 미국에서 노동자 투쟁이 분출한 것은 ‘국가가 허락한 노동쟁의’에 안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제약에 구애되지 않고,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에서도 아래로부터 투쟁을 건설했기 때문이었다.(트로츠키주의자들을 비롯한 혁명가·급진좌파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관련 기사 본지 325호 ‘뉴딜과 1930년대 미국 노동운동의 교훈’)

노동계급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이런 투쟁이 중요하다. 바이든에게 “친노조”라는 꽃을 달아 주는 것은 그런 투쟁을 건설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심상정 의원의 바이든 칭찬, 착각이다

김지윤

바이든이 “친노조”라는 호평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온다. 5월 14일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가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썼다.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 ... 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말만 ‘노동존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었을 것이다. 심 의원은 바이든 칭찬에 덧붙여 대한민국 정부도 바이든처럼 친노조 정책들을 채택해 “노동존중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자신과 정의당의 ‘노동’ 강조를 부각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정의당이 노동 친화성을 부각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방식이 중요하다.

바이든에 앞서 이미 오바마가 “친노조”, “중산층 회복”을 강조했었다. 오바마가 2015년 노동절 연설에서 노조 가입을 권한 것에 진보 내 일부가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공황 직후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경제] 위기라는 기회를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강화했다. 이 때문에 실질임금·복지가 삭감되고 실업률·빈곤율도 높아지는 등 미국 노동계급의 삶은 더 나빠졌다.

오바마 당선은 많은 미국인들에

게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집권 8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노동대중의 진보적 변화 염원을 거듭 저버렸다. 그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트럼프 당선에 밑거름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 민주당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 한국 민주당 정부에 대한 간접적 비판으로도 효과적이지 않다. 당장 문재인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고 받아 온 보파리에 기업주 언론들이 환영 논평들을 내는 것을 보라.

오바마 정부 시절 공공부문·윙마트·패스트푸드 노동자 투쟁 등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오랫동안 사기 저하된 미국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활짝 보여 준 투쟁들이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도 그때 시작했다. 이 운동은 지난해 트럼프 정부와 미국을 뒤흔들며 분출했었다.

오바마의 미국에서 희망이 있었다면 이런 투쟁들이었다. 이 투쟁들은 오바마 정부에 환상을 덜 가졌다. 사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그간 심상정 의원은 개혁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회 바깥의 대중 투쟁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 정치에는 기층의 자체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든의 사탕발림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진정한 교훈들이다.